

의안 번호	191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4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4.(금)
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3. 21.(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세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 나. 위원회 구성(안 제2조)
 -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
 -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로부터 구청장직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
 다.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(안 제4조)
 - 개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
 라. 위원회의 직원(안 5조)
 - 위원장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
 - 중구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 가능
 마.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6조)
 -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, 비품,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
 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·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 요청
 -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

바. 수당 및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(안 제7 ~ 8조)

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
-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세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-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당선인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-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인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-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-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시·도: 20명 이내
 2. 시·군 및 자치구: 15명 이내
- ⑥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⑦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공무원법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9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